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7(2022.05)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와 국가 채무불이행 선언: 원인과 전망



CONTENTS

I. 채무불이행 선언

II. 경제 위기의 원인

III. 경제 위기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IV. 시사점 및 전망

작성

책임연구원 이지혁 (6255-3614)

j.lee@koreaexim.go.kr

< 요약 >

I. 채무불이행 선언

- 스리랑카 정부는 4월 12일 재무부 성명을 통해 IMF와 국제 채권단과 채무변제 유예 및 대외채무 재조정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외채(약 510억 달러)의 상환을 중단하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였음.
-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 4월 최고치였던 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1월 16억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이후 2022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20억, 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3월에는 다시 전월보다 16.1% 감소한 19.4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함.

II. 경제 위기의 원인

- 스리랑카가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진입한 지난 10년 동안 외채구조는 상환 기간이 긴 저금리의 양허성 차관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상환 기간이 짧고 이자율과 위험성이 높은 비양허성 차관 중심으로 변경됨.
- 고타바야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부가가치세 인하,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대상 기업 범위 완화, 국가건립세 폐지, 소득세 인하, 원천징수제도 조정 등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2019년 채무관리 계획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아울러 2021년의 유기농 전환 정책이 실패하면서 농산물 공급 부족과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스리랑카에서 해외 송금과 의류 산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외화 수입원인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테러 사건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정전 및 생필품 공급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III. 경제 위기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 하에서 보유 외환의 고갈은 식량, 연료, 의약품 등 생필품의 부족을 초래하면서 스리랑카 전역을 대혼란에 빠뜨림. 극심한 경제난에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일부 시위대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자 스리랑카 정부는 4월 1일 및 5월 7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나,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총리의 사퇴를 압박하자 그동안 사퇴를 거부해왔던 마힌다 총리가 5월 9일 전격 사퇴함.

IV. 시사점 및 전망

- 스리랑카의 외환위기는 국채 발행으로 지탱해 온 경제가 외부충격에 약점을 노출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됨.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위기가 표면화되었지만, 스리랑카가 현재 직면한 문제는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임. 경제 회복력의 하락은 포퓰리즘 경제 정책과 악화하는 거시경제 지수를 무시한 현 정부의 자만에서 기인한 측면이 큼.
- 정치적 교착 상황은 경제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내각 사퇴와 통합 정부 구성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이번 디폴트 선언은 우리 정부 및 기업과 관련된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정치·경제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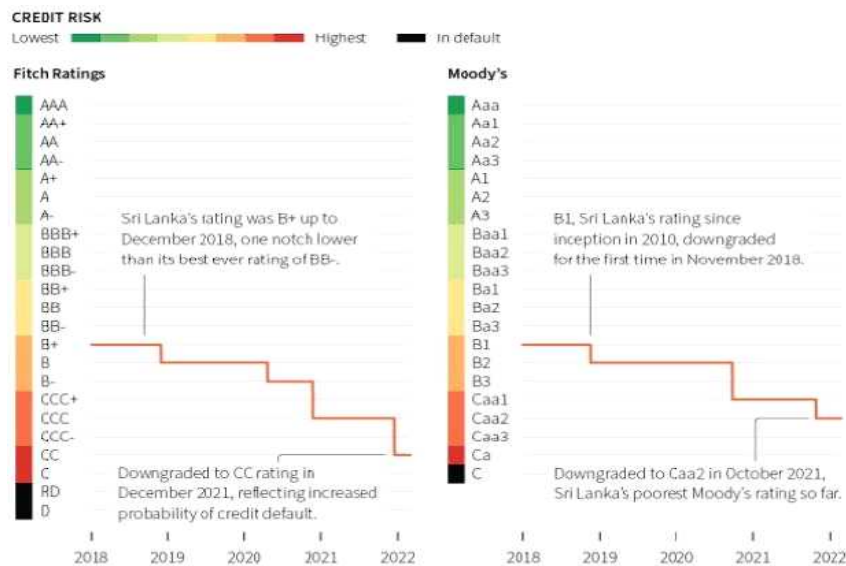


I. 채무불이행 선언

하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채무상환의 일시적 중단 선언

-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는 4월 12일 재무부 성명을 통해 IMF와 국제 채권단과 채무변제 유예 및 대외부채 재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외채(약 510억 달러)의 상환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 위라싱게(P. Nandalal Weerasinghe)는 '하드 디폴트(hard default)¹⁾ 상황을 피하고자 대외부채 지급을 '일시 유예(soft default)'한다고 발표하면서, IMF를 비롯한 채권단과 협상하는 동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식료품, 연료 등 필수품의 수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힘.
- 주요 신용평가사는 작년 말부터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디폴트 등급으로 재차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함. Fitch와 S&P는 디폴트 선언 전인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CCC에서 CC로 하향 조정하였음. 디폴트가 선언된 4월 12일 동 기관들은 다시 신용등급을 디폴트 직전 수준까지 내렸으며, Moody's는 동월 18일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Caa2에서 Ca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동월 25일 S&P는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다시 CC에서 선택적 디폴트인 SD(selective default)로 3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스리랑카를 '거의 채무불이행(near default)'에 가깝고 '결제 능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라고 평가했으며, S&P는 '일부 채무불이행의 실질적인 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고, Moody's는 '매우 낮은 외환보유액과 부채 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힘.

[그림 1] 스리랑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추이



자료: Fitch Ratings, Moody's

1) 채권단이 전면 손실을 보는 실질적 디폴트를 지칭함.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감소

- 스리랑카의 총외채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약 510억 달러(약 62.9조 원)로 추정되는데, Bloomberg에 따르면 이 중 올해 상환해야 할 외채는 약 70억 달러로 추정됨²⁾. 4월 18일 지급해야 하는 이표(coupon payment)가 7,820만 달러, 7월 2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10억 달러임. Fitch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2022~26년) 상환해야 할 외채가 약 260억 달러임.
-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2018년 4월 9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1월 16억 달러까지 지속해서 감소하였음. 이후 2022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20억, 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3월에는 다시 전월보다 16.1% 감소한 19.4억 달러³⁾ 수준으로 하락함(월평균순입액의 1개월분에 상응).

[그림 2] 스리랑카 외환보유액 추이(백만 달러)



자료: www.ceicdata.com

구제금융 협상의 추진

- [국제금융기구 및 UN] 4월 18일 스리랑카는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이끄는 협상단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해 19일부터 22일까지 IMF와 구제금융 확보를 위한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무적 논의를 위한 2차 협상이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되어 있음. 아울러 스리랑카 정부는 세계은행(WB) 및 UN과도 경제위기를 해결할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음.
- 스리랑카 재무장관은 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향후 6개월 동안 30억 달러가 필요하며, IMF와의 협상을 통해 약 4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4월 19일 IMF 스리랑카 임무단장 노자카 마사히로(Nozaka Masahiro)는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스리랑카가 신속금융제도(RFI, Rapid Financing Instrument) 하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힘.

2) 스리랑카가 올해 갚아야 할 외채의 총액은 매체에 따라 4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까지 추정에 큰 차이가 있음.

3) 중국 인민은행이 제공한 15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포함.



- 스리랑카는 IMF로부터 신속금융제도 하의 구제금융뿐만 아니라 확대금융지원(EFF, Extended Fund Facility) 하의 구제금융 지원도 희망하고 있음.
- IMF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재무장관은 의약품 및 생필품 구매를 위한 원조 자금으로 향후 4개월 간 세계은행으로부터 최대 6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발표함. 스리랑카 대통령실 미디어국은 지원금이 의약품, 식품, 연료 확보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4월 20일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은 IMF와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환경 보전을 조건으로 '자연 보호-채무 스와프(debt-for-nature swaps)⁴⁾를 통해 구제금융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에 대한 금융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스리랑카의 대 중국 채무 의존도가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음.
- 인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30억 달러 이상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는데, 5억 달러의 단기 차관, 생필품 구매를 위한 10억 달러의 신용한도, 4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연료 구매를 위한 7억(5억+2억) 달러의 신용한도, 아시아결제동맹(Asian Clearing Union)⁵⁾을 통한 약 10억 달러의 금융지원(상환 연기)을 제공함.
- 한편 방글라데시는 5월 8일 스리랑카에 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상환 연기를 약속했는데, 이미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으로 통화스와프 상환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음.
- **[중국]** 중국은 인도와 달리 스리랑카의 외환위기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후 태도를 전환하여 5월 3일 스리랑카에 3억 위안(약 574억 원)의 구제금융을 공여(grant)의 형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 후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차관 제공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했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채무 재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1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채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후 스리랑카에 15억 달러의 신디케이트론⁶⁾을 제공했으며, 작년 12월에는 스리랑카와 1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함.
- 스리랑카는 지난 3월 중국 정부에 25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및 신용한도를 포함한 긴급 원조를 요청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몇 주가 지난 4월 21일 3,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긴급 인도적 지원(urgent emergency humanitarian aid)'을 제공하겠다고 응답함.

4)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와 해당 국가의 환경 보전을 교환(swap)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채무를 선진국 민간단체 등이 매입하여 이를 탕감해 주는 대가로 해당 국가의 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자연보호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임. 동 방안은 최근 개도국의 외채 및 환경 보전자금 조달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5) 1975년 아시아결제동맹(ACU)은 달러화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결제와 아시아 단일통화를 지향하며 출범했으나, 가입국이 일부 국가로 국한된 소규모 기구에 머물러 있음. 회원국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몰디브,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있음.

6) 최소 2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syndication)을 구성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기업이나 국가 등에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 대출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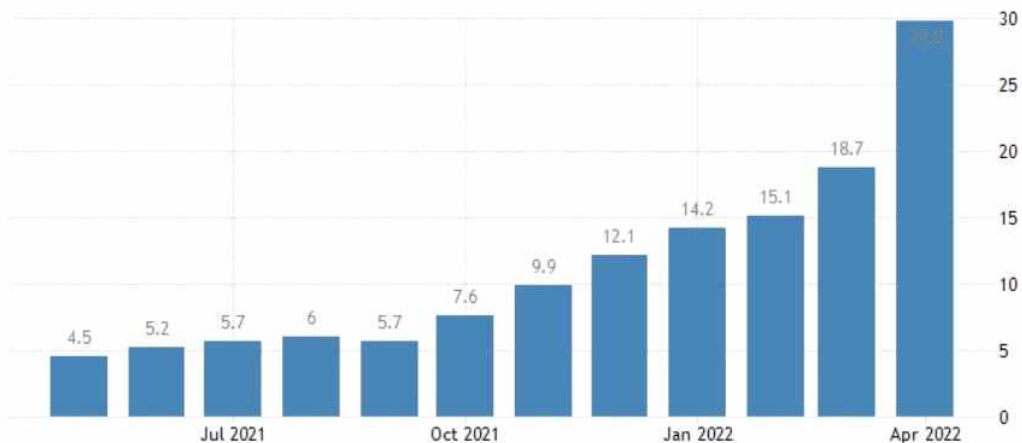


- 스리랑카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에 쌀, 의약품, 생산 자재 및 기타 필수품 5천 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음. 이와는 별도로 중국 원난성은 스리랑카에 150만 위안에 상응하는 음식 패키지를 기부한다고 발표하였음.
- IMF가 제공할 구제금융이 모두 스리랑카의 대 중국 외채 상황에 사용될 것을 우려해, 스리랑카가 중국과의 채무 재조정 협상을 타결하기 전까지는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됨. 이에 대해 4월 29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스리랑카 재무장관은 채무 재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다른 채권국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며, 중국에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
- 5월 2일 치젠홍(Qi Zhenhong) 주스리랑카 중국 대사는 스리랑카 재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중국은 스리랑카와 IMF의 채무 재조정을 지지하며, IMF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IMF가 스리랑카의 사정을 고려해 이른 시일에 합의에 이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4월 8일 기준금리 700bp 인상 단행

- 4월 8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700bp나 대폭 인상함. 이로써 스리랑카의 기준대출금리는 14.5%, 기준예금금리는 13.5%로 조정됨.
- 스리랑카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7%, 29.8% 상승했으며, 식료품의 경우 동 기간 각각 46.6%, 30.21%의 기록적인 상승을 시현하였음.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최근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원인으로 루피화의 평가절하, 원자재 국제 가격 상승, 경색된 내수 공급과 수요 폭증을 꼽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함.

[그림 3] 스리랑카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 추이(%)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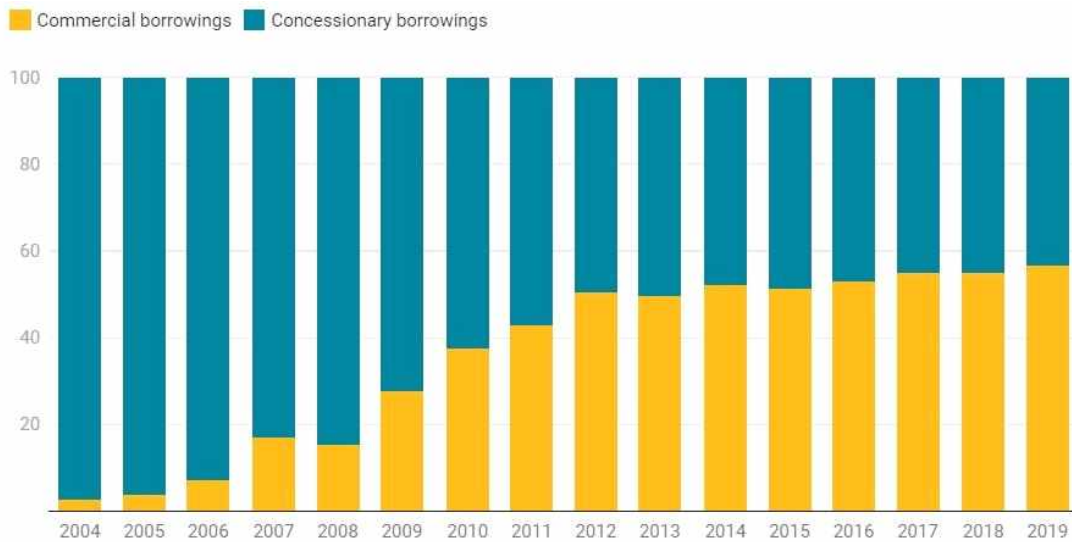


II. 경제 위기의 원인

일련의 실패한 정책과 대응

- **[대외채무의 증가]** 스리랑카가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진입한 지난 10년 동안 외채구조는 상환기간이 긴 저금리의 양허성 차관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상환 기간이 짧고 이자율이 높은 비양허성 차관 중심으로 변화하였음.
- 총외채 중 상업성 차입의 비중이 2004년 2.5%에서 2019년에는 56%까지 증가함.
- 스리랑카 정부는 2007년 처음으로 5억 달러 상당의 외화표시 국채(ISB) 발행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3번의 국채를 발행함. 스리랑카는 기존의 외채를 갚기 위해 높은 이자 부담률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선호해 왔는데, 이는 국제금융기구의 차관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임.
- 10년 내 만기가 예정된 국채의 이자율은 5.75%~7.85% 사이며 만기는 5~10년 사이임. 스리랑카의 공공부채는 2019년 GDP 대비 94%에서 2020년 119%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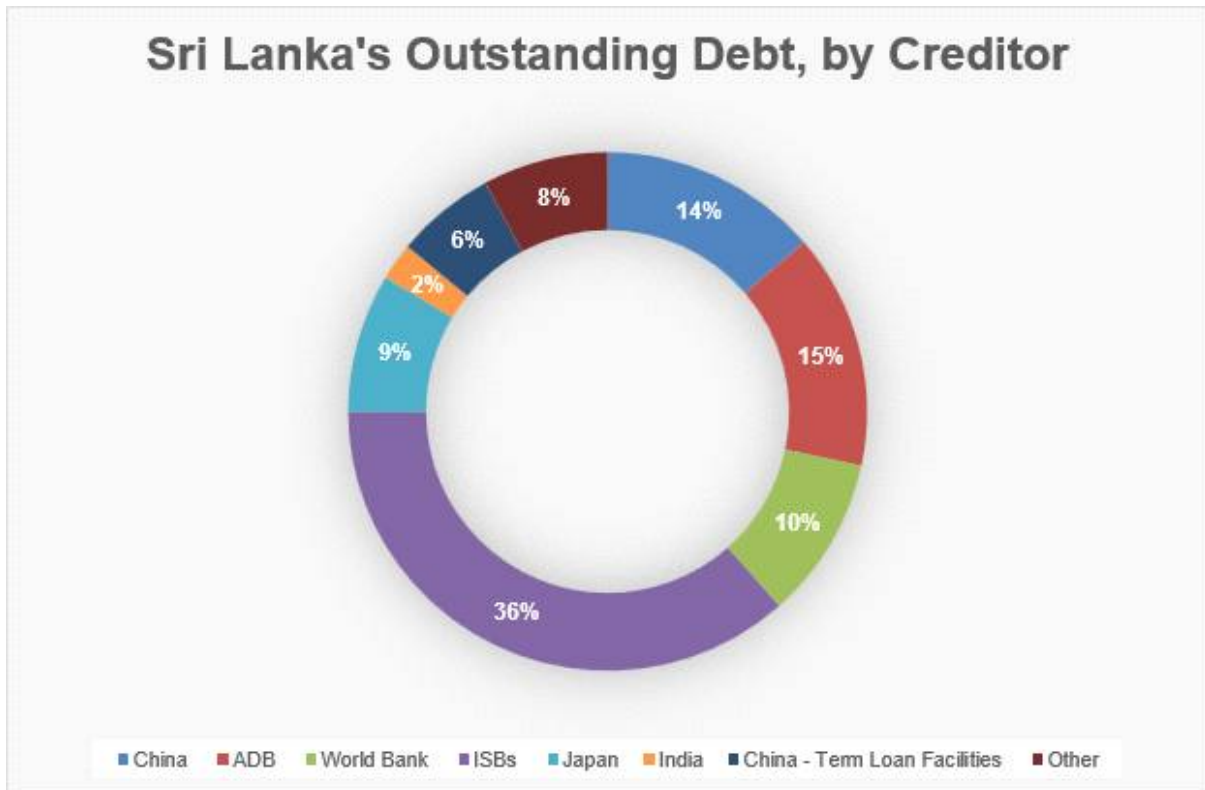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External Resource Department
 주) 세로 축: % / 2019년 이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음.

- 서구 및 인도 언론은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으로 추진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차관으로 시공된 인프라가 경제 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임.
- 수도 콜롬보에 본사를 둔 Verite Research는 스리랑카 외채의 15%를 차지하는 중국이 외환위기의 절대적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국채를 지목함.⁷⁾



-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총리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2005~15년) 시기에 스리랑카는 친중국 노선을 펼치며 중국 자본으로 각종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음.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여 항구, 도로, 공항, 에너지, 도시개발, ICT 인프라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약 35억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였음(2020년 말 기준).⁸⁾
- 2017년 중국이 제공한 차관으로 함반토타항을 건설했으나 차관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쥬(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었음.
- 이러한 형태의 중국 차관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로부터 경제적 약소국들을 중국에 예속시키기 위한 이른바 “채무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

[그림 5] 스리랑카 대외채무 구조



자료: 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 Sri Lanka; Diplomat(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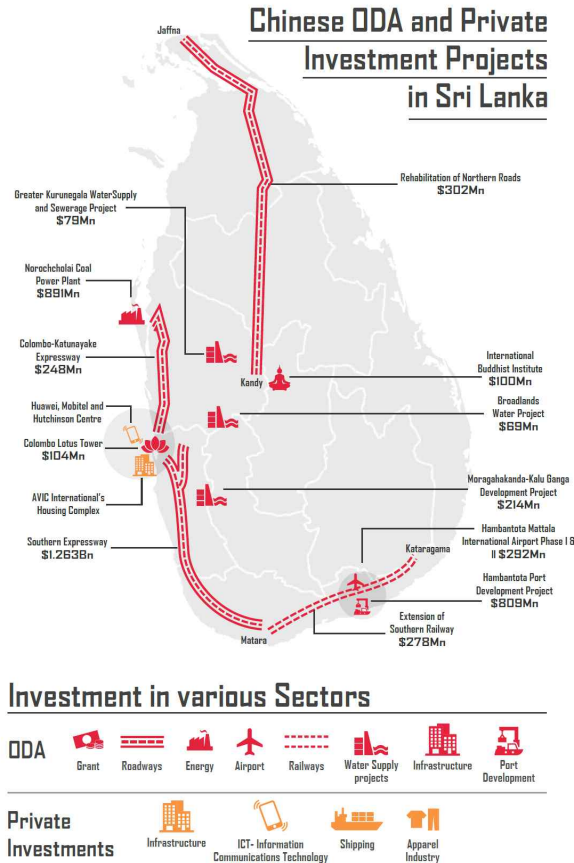
주) 2021년 연말 기준 스리랑카 대외자원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콜롬보 대학의 공공부채 분야 학자인 우메쉬 모라무달리(Umesh Moramudali)가 작성한 그래프임.

7) 스리랑카 정부는 대 중국 부채의 총액을 실제보다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 Verite Research의 주장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가 공개한 공공부채에 대한 정보는 중앙정부가 직접 보유한 부채에 한정되고 국영기업의 부채는 제외되었음.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 4월 말 기준 대 중국 외채가 전체 외채의 10%에 해당하는 약 33억 달러로 밝히고 있지만, 계상 방식에 따라 10%에서 20%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35억 달러는 중국이 보유한 스리랑카 중앙은행 및 국영기업의 채권이 제외된 양자차관 금액만을 합산한 것임.



[그림 6] 중국의 대 스리랑카 대외원조 및 민간 투자(2005~15년)



자료: Gateway House(2016)

주) 그림 자료에서 OD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 통계에는 OECD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상응하는 개념이 없으며 원조와 경제협력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중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해외 투자, 무역신용, 프로젝트 금융 등과 완전히 분리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움.

-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2019년 고타바야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비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약속하고, 동년 11월 취임 후 즉시 부가가치세 인하(15%→8%),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대상 기업 범위 완화(1,200만 루피→3억 루피, 매출액), 국가건립세(nation building tax)⁹⁾ 폐지, 소득세 인하(최고소득층의 세율을 24%에서 18%에 낮춤), 원천징수제도 조정 등을 발표함.
- 감세 정책은 재정수지 적자 악화(GDP 대비 재정수입 비중이 2019년 12.6%에서 2020년 9.2%, 2021년 8.9%로 하락)로 인한 스리랑카 신용등급의 하향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스리랑카 정부의 국제자본 접근성의 상실을 초래함.
- Fitch는 2019년 12월 스리랑카의 신용등급 전망치를 'stabl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하면서, 조세 감면 조치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와 신정부의 재정 및 경제 개혁 후퇴로 인한 채무상환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힘. 동 기관은 부가가치세 인하와 국가건립세 폐지만으로도 2020년 세입 손실액이 GDP 대비 2%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9) 국가건립세는 국가건축세법에 의해 2009년 2월 1일부터 도입되었는데, 이 세금의 주된 목적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일어난 내전으로 손상된 인프라 시설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임. 납부 대상자는 수입업, 제조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였음.



[표 1] 부가가치세 및 국가건립세 변화

시행일	VAT	NBT
2019년 1월 1일 이전	15%	2%
2019년 1월 1일 이후	8%	폐지

자료: BDO Tax News

- 마힌다 정권(2005~15년)은 수십 년 간 지속된 내전이 종식된 후 국가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이와 유사한 조세감면 정책을 편 적이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고타바야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감세를 선거 공약으로 약속하고 집권 후 바로 시행함.
- 스리랑카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하와 국가건립세 폐지 같은 간접세 인하를 통해 물가를 낮추고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발발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재정 악화를 가속시킴.
- 결과적으로 정부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세입을 줄이는 것은 위험한 정책이었으며, 재정적자 감소에 역점을 두었던 2019년 채무관리 계획은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W.D. 라크슈만(W.D. Lakshman)은 퇴임 후 인터뷰에서 감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함.
- 스리랑카의 GDP 대비 조세 수입은 1990~92년 평균 18.4%에서 2017~19년 12.7%, 2020년 8.4%까지 계속 하락함. 정부의 재정 충당과 대외채무 원리금 기일 도래에 따른 자금 수요는 주로 중앙은행의 적자금융 및 외부 금융지원으로 해결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IMF의 경고(금리 인상, 세수 확보, 정부 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경부터 기록적인 양의 화폐를 발행함.
- **[유기농 전환 정책]** 2021년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를 세계 최초로 화학비료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화학 비료·살충제·제초제 수입을 제한하고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하는 정책을 수립함.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동 정책에 따라 2021년 4월 26일부터 화학비료와 살충제 수입이 전면 금지됨.
- 고타바야 대통령은 그동안 스리랑카가 화학비료 및 농약 수입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으나, 농업 생산성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토양과 생물 다양성의 파괴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동 정책을 강행함.¹⁰⁾
- 2021년 미국 농무부(USDA) 보고서는 스리랑카가 유기농 비료 생산 능력이 부족한 점과 화학비료를 대신할 유기농 비료를 수입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기농 전환이 스리랑카의 식량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으며, 스리랑카 국립과학재단은 동 정책을 전면화할 경우 스리랑카의 농작물 생산량이 쌀 30~50%, 차 50%, 감자 30~50%, 옥수수 5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10) 스리랑카는 20세기에 농약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 국가로서 농약 수입 금지조치 시행 전 매년 농약 수입에 약 3~4억 달러를 사용하였으며,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해마다 약 2만 명이 농약에 중독되고 약 2천여 명이 사망했음.



- 농업 관계자들은 화학비료를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함. 200만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장담했던 유기농 전환이 실패하면서 스리랑카는 심각한 식량난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Verite Research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농민(1,042명)의 2/3 이상이 정부의 유기농 전환을 지지했지만, 이들은 유기농 전환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답함. 한편 설문에 응한 농민의 20%만이 적절한 유기농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스리랑카 농민운동 조직인 '토지 및 농업 개혁 운동(MONLAR)'은 작년 5월 고타바야 대통령의 유기농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①현장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부재, ②지나치게 갑작스런 계획 발표, ③농업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 조정체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농업부의 조언에 따라 동 부처에서 판매한 액체 유기비료(liquid organic fertilizer)를 사용한 농민들은 이전과 비교해 쌀, 옥수수, 채소 작황이 매우 부진하며, 특히 벼농사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함.
- 유기농 전환 6개월 만에 쌀 생산량의 20%가 감소하면서 쌀 가격은 50% 상승했고, 스리랑카 정부는 부족한 공급량을 조달하기 위해 4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쌀을 수입해야 했음. EIU는 쌀 공급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까지 쌀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공급원인 차(茶) 산업은 2021년 4억 2,5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 11월에 차, 코코넛, 고무 생산에 한해 화학비료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였으며, 현재는 화학비료 사용 금지령을 전면 해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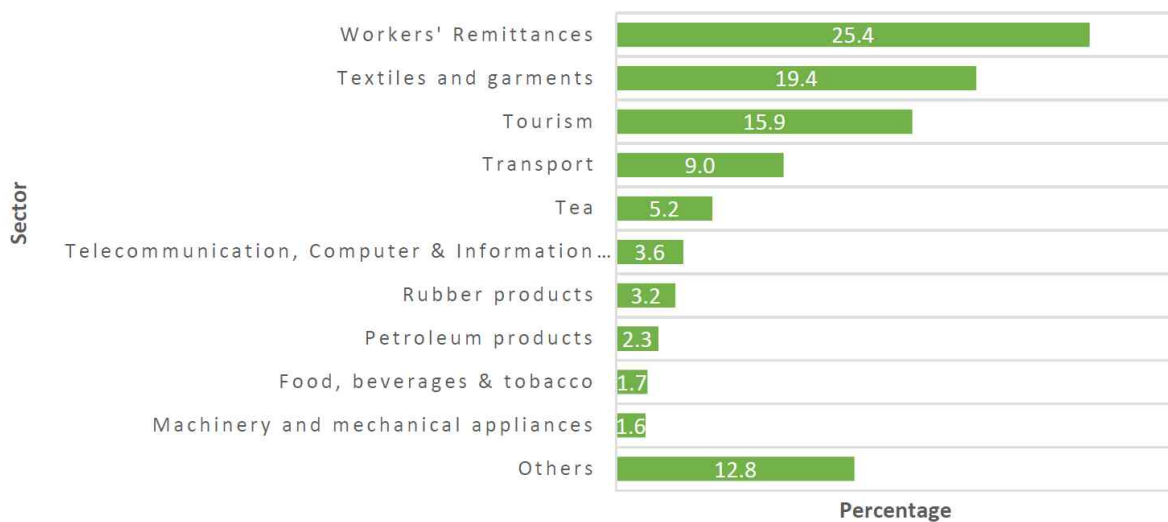
잇따른 대내외 악재

- **[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단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 위기를 초래했으나, 그 충격은 스리랑카처럼 경제 규모가 작고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더 강력하게 미침.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6%의 역성장을 기록한 스리랑카 경제는 2021년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4분기부터 보유외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 비필수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늘어난 수입량은 수출실적 증가분을 상쇄, 무역적자 규모가 2020년 60억 달러에서 2021년 81억 달러로 악화됨. JP Morgan은 스리랑카의 2021/22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6,97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전자제품, 사과 등 약 300개의 비필수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음.
- 스리랑카는 2020년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 사례가 발견된 이후 두 차례의 대유행을 성공적으로 관리했으나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스리랑카 전국에 여행 제한과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해야 했음.



- **[관광 산업의 붕괴]** 스리랑카에서 해외 송금과 의류 산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외화 수입원인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4월 21일에 발생한 부활절 테러 사건으로 이미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정전 및 생필품 공급 부족, 그리고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¹¹⁾
 - 부활절 테러 사건은 수도 콜롬보의 교회와 호텔 등 전국 8곳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사건으로 290여 명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함. 현지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인 NTJ(National Thowheed Jamath)가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된 동 사건은 스리랑카의 오랜 내전의 원인이었던 힌두교(타밀족)-불교(싱할라족) 간의 종교-종족 갈등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었음. 동 사건으로 2019년 스리랑카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전년보다 21% 감소한 1백 90만 명이었음.
 - 전통적으로 스리랑카에 많은 관광객을 송출하는 국가는 인도, 독일, 영국 등이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벨라루스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들 국가로부터 스리랑카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음.
 - 동 전쟁 이전인 2021년 10월 러시아는 스리랑카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송출했으며, 우크라이나는 2021년 1월부터 9월 사이 스리랑카에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송출한 국가임(동 기간 중 러시아는 10위).

[그림 7] 스리랑카의 2018년 외화 수입원 구성(%)



자료: Sri Lank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2018)

11) 2018년 기준 해외 송금은 스리랑카의 총 외화수입의 25.4%를 차지했으며, 이어 의류 산업과 관광이 각각 19.4% 및 15.9%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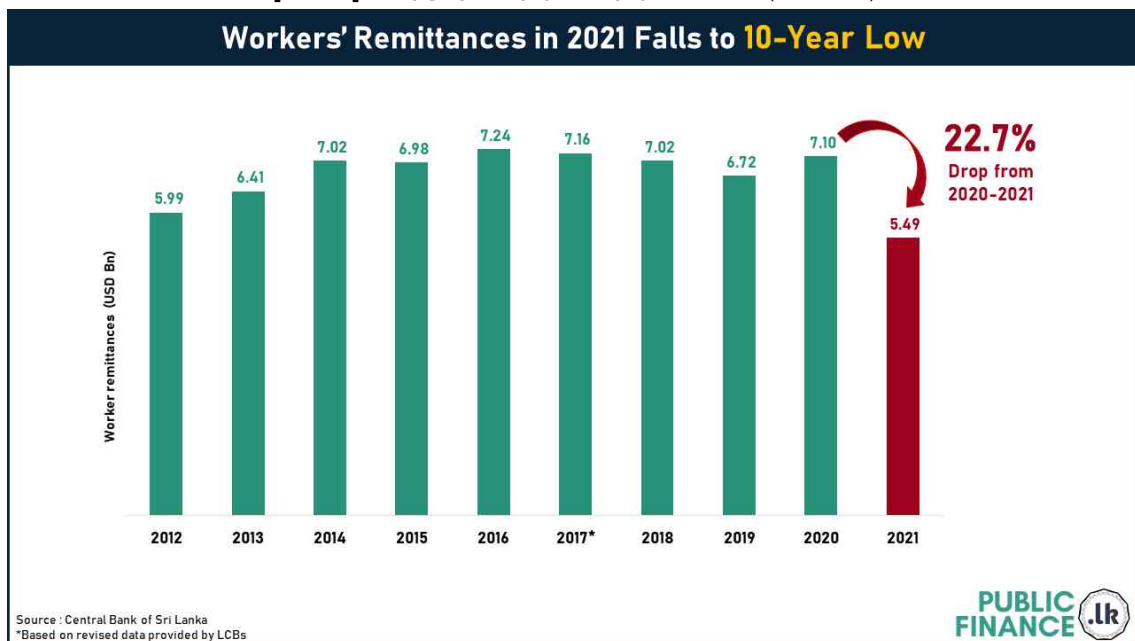
[그림 8] 스리랑카의 관광 수입 변동(백만 달러)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 [해외 송금 감소]** 팬데믹의 장기화와 환율 시장 불안정성은 스리랑카 외화 수입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송금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도에는 송금액이 다소 늘었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2.7%가 감소함. 2016~20년 사이 해외 송금으로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평균 7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이는 스리랑카의 국제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데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함. 따라서 해외 송금의 감소는 이미 취약한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미침.

[그림 9] 스리랑카인 해외근로자의 송금 추이(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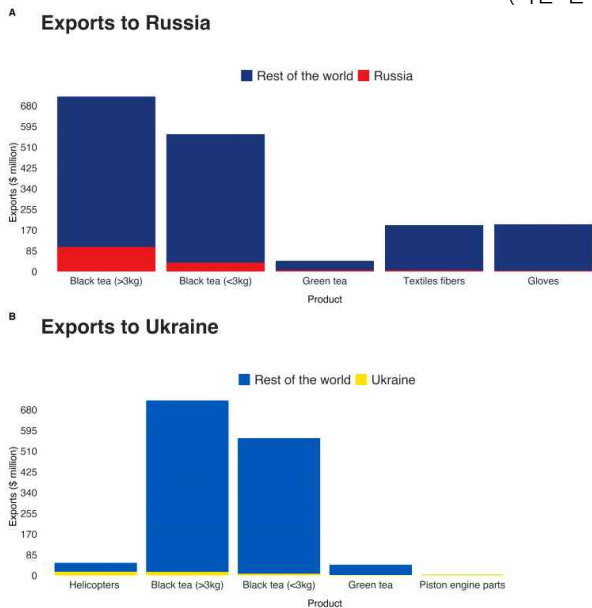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Public Financ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봉착한 스리랑카 경제가 디폴트 선언 외에는 위기를 극복할 다른 방법이 없음을 명확히 한 사건임. 동 전쟁은 이미 취약한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켜 이용 가능한 해외자금 접근성을 약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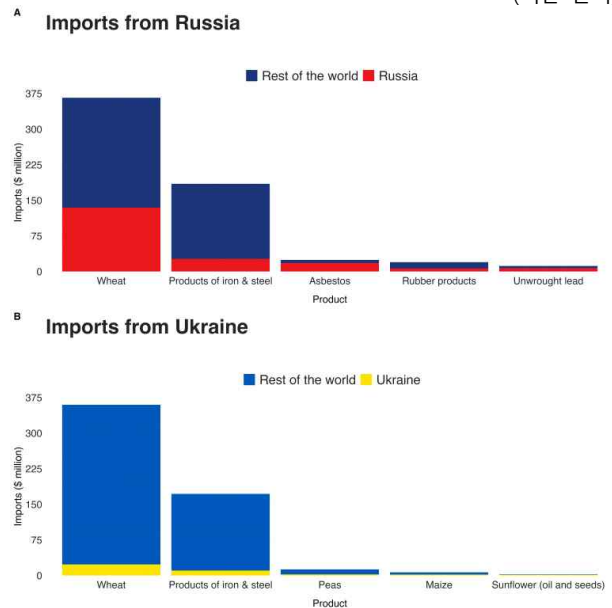


- 스리랑카는 수출이 2019년 GDP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지향적 국가이지만, 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수입하고 농산물과 의류 같은 저부가가치 상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주요 공산품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스리랑카는 팬데믹과 전쟁으로 초래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매우 취약하여, 작년 12월의 경우 원유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하였음.
- 스리랑카의 대 러시아 및 대 우크라이나 무역은 스리랑카 총수입의 2%, 총수출의 2.2%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동 국가들은 밀의 필수 수입원이자 홍차의 주요 수출처임. 동 국가들은 스리랑카가 수출하는 발효 홍차의 18%를 구매하고, 스리랑카가 수입하는 밀의 45%를 공급하며, 석면, 철, 구리, 염화칼륨의 주요 공급처임. 아울러 스리랑카가 수입하는 콩, 해바라기유 및 씨, 완두콩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산임.

[그림 10] 스리랑카의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출
 (백만 달러)



[그림 11] 스리랑카의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입
 (백만 달러)



자료: Talking Economics



Ⅲ. 경제 위기가 초래한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4월 1일과 5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비상사태 선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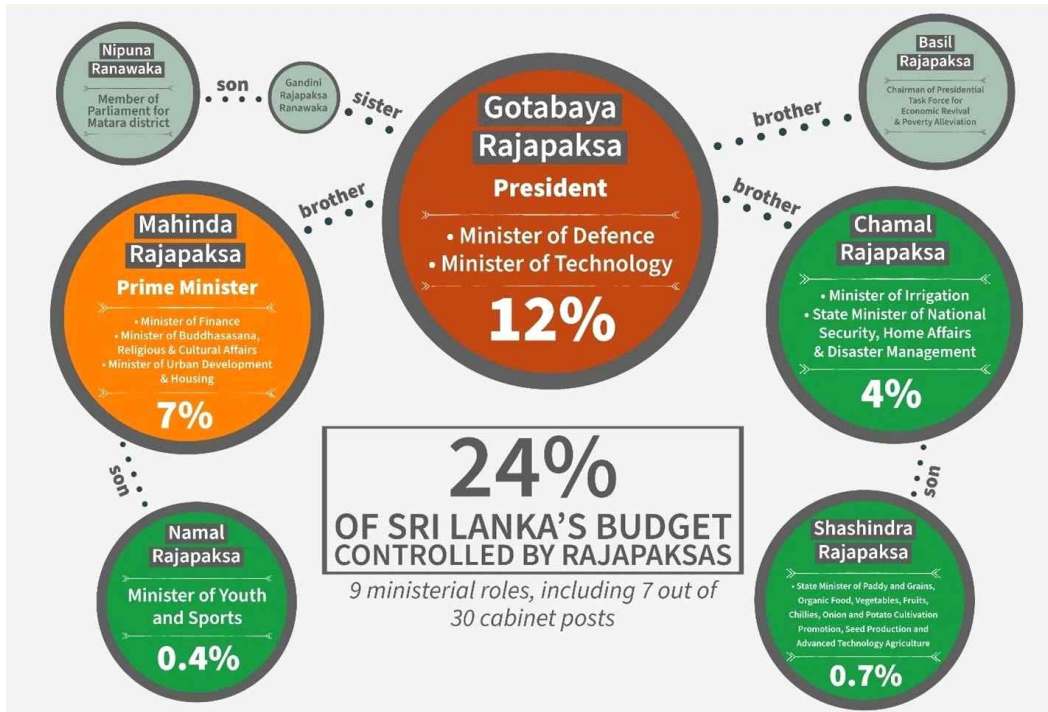
- 주요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보유 외환의 고갈은 식량, 연료, 의약품까지 생활 전반에 필요한 생필품의 부족을 초래하면서 스리랑카 전역을 대혼란에 빠뜨렸음.
- 해외에서 석유와 석탄을 제때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수력발전소도 극심한 가뭄으로 정상 가동되지 않아 3월 말에는 매일 13시간씩 순환 단전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의약품 부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
- 3월 31일 극심한 경제난에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일부 시위대가 수도 콜롬보 교외의 대통령 사저 앞에 몰려들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자, 4월 1일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에 36시간 통금령을 선포했으며,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5월 7일 다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시위대는 “고타! 집에 가라!(Gota! Go home!)”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는 고타바야 대통령과 마힌다 총리의 퇴진은 물론, 스리랑카 정치에서 라자팍사 가문이 퇴진할 것을 요구함.
- 라자팍사 가문은 대통령과 총리뿐만 아니라 장관을 포함한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음. 내각이 전원 사퇴하기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전직 대통령인 마힌다가 총리를 맡았고(3개 장관직 겸직), 대통령의 동생인 바실(Basil)은 재무부 장관, 대통령의 만형인 차말(Chamal)은 관계시설 장관 및 정무 장관¹²⁾, 조카인 나말(Namal)과 사신드라(Shashindra)는 각각 체육·청년부 장관과 정무 장관¹³⁾직을 수행했음. 겸직을 통해 라자팍사 가문이 9개의 장관직을 맡았으며 국가 예산의 24%를 담당했음.
- 5월 들어 교사, 기관사, 국책은행 직원들이 시위에 동참하면서 콜롬보에 있는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열차 운행이 중단됨. 스리랑카 노총 지도자들은 대통령과 내각이 사퇴하지 않으면 대규모 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12) 부처명: Internal security, Home Affairs and Disaster Management

13) 부처명: Paddy and Grains, Organic Food, Vegetables, Fruits, Chilies, Onion and Potato Cultivation Promotion, Seed Production and Advanced Technology Agriculture



[그림 12] 라자팍사(Rajapaksa) 가문의 족벌 정치



자료: Sri Lanka Campaign(2021)

경제 위기에서 정치 위기로 확산

-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스리랑카가 직면한 경제 위기를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 성난 민심과 야당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4월 3일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한 내각 전원(24명)과 중앙은행 총재가 사표를 제출했으며, 대통령은 야당 인사를 포함한 국민 대통합 정부 구성을 제안함. 동월 5일에는 여당연합에 속했던 국회의원 41명이 무소속으로 이탈함에 따라, 의회 내 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지게 됨.¹⁴⁾
- 제1야당(SJB, Samagi Jana Balawegaya)은 5월 3일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사퇴를 거부해왔던 마힌다 총리가 이에 대한 투표 절차 없이 동월 9일 전격 사직서를 제출함. 사실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225석 중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SJB의 국회의원 수가 54명에 불과해 군소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음.¹⁵⁾
- 마힌다 총리의 사퇴는 수도 콜롬보에서 정부 지지자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짐.
- SJB는 2020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킨 헌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 정족수 2/3의 지지가 있어야 하므로 불신임 투표보다 실현 가능성이 작음.

14) 스리랑카 정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총리가 내정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 요소를 혼합하고 있음.

15) 2020년 총선에서 현 총리가 소속된 여당연합(SLPP, Sri Lanka Podujana Peramuna)은 59%를 득표하여 225석 중 145석을 차지했으며, 2019년 대선 후보였던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가 이끄는 SJB는 24%를 득표하여 54석을 차지함.



[표 2] 스리랑카의 정치적 선택

방안	절차	요건
대통령 탄핵	대법원이 탄핵소추안을 심의 후 결정문을 의회에 제출, 의회 투표	국회의원 2/3의 찬성 필요 (최소 150명)
내각 불신임 투표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 필요 (최소 113명)
헌법 개정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20차 수정 헌법 개정	국회의원 2/3의 찬성 필요 (최소 150명)
의회 해산	- 대통령이 해산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국회 구성 후 2.5년이 경과해야 가능 - 국회 표결로 해산 가능	-
총리 해임	- 대통령 권한으로 해임	-

자료: EIU



IV. 시사점 및 전망

스리랑카는 현재 다차원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

- 스리랑카의 외환위기는 국채 발행으로 지탱해 온 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성을 노출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됨.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위기가 표면화되었지만, 스리랑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결과임. 경제 회복력의 하락은 포퓰리즘 경제 정책과 악화하는 거시경제지표를 무시한 현 정부의 자만에서 기인한 측면이 큼.
- 부채를 갚지 못해 중국에 99년 간 조차된 함반토타항이 '부채의 덫(debt trap)'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기존 외채의 원리금을 갚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한 스리랑카의 경우는 외채와 관련하여 저소득 국가가 중진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대표적 실패 사례임.
- 스리랑카 정부가 현재 당면한 경제 위기는 시민과 야당의 불만을 촉발하면서 정치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음. 한 가문이 정부의 주요 요직을 장기간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정치형태는 민주주의에서 작동해야 할 균형과 견제를 무력화시킴.

경제 위기의 극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IMF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금융지원은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언론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주목하는 코로나19, 관광 산업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만성적인 내부적 요인의 개선이 시급함.
- 팬데믹 발발 이전부터 스리랑카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확대, 높은 대외채무 의존성 등이 지적되어 왔음.
- 정치적 교착 상황은 경제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내각 사퇴와 통합 정부 구성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스리랑카의 정치·경제 상황변동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ODA 중점 협력국인 스리랑카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여, 도로·교통, 수자원, 교육, 의료, 공공분야를 포함한 사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여 왔음. 아울러 상당수의 우리 기업이 건설, 의료, 제조업 분야 등에 진출했으며, 최근 신도시 및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하고 있음.
- 이번 디폴트 선언은 우리 정부 및 기업과 관련된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스리랑카의 정치·경제 상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 강선일. 2022. " '유기농업 전환' 나선 스리랑카의 시행착오가 던지는 교훈." 한국농정. 3월 20일.
- 경향신문. 2020.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 떨어진 스리랑카 경제." 3월 28일.
- 김민희·김도연. 2022.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Vol 5(6).
- 이머릭스. 2022.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유기농 전환 국가정책 실패로 농업 생산량 크게 감소."
- 한국수출입은행. 2022. "파리클럽 3월 정기회의 스리랑카 논의 동향 보고."
- DailyFT. 2021. "Dwindling Worker Remittance Inflow Tightens Foreign Exchange Market." August 31.
- Dasgupta, Saibal. 2022. "China's Global Image Under Strain as Sri Lanka Faces Debt Trap." Voice of America. April 25.
- Deccan Herald. 2022. "New Delhi Has Extended Assistance of Over \$3 Billion to Sri Lanka in 2022: Indian High Commission." May 3.
- Gateway House. 2016. "Chinese Investment in Sri Lanka."
- Moramudali, Umesh. 2022. "China, India, and Sri Lanka's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Diplomat. May 05.
- Nikkei Asia. 2022. "Sri Lanka Pays Foreign Debt at Expense of Domestic Economy." January 18.
- Reuters. 2022. "Sri Lanka Says India to Provide Additional \$500 mln For Fuel." April 20.
- Straits Times. 2022. "Sri Lanka Economy Being Crushed by War in Ukraine." March 17.
- Sri Lanka Campaign. 2021. "Dynastic Politics: Rajapaksa Family Control of the State Budget." March 5.
- Swenson, Shea. "Sri Lanka's Organic Experiment Went Very, Very Wrong." Modern Farmer. March 26.
- Verite Research. 2021. "Navigating Sri Lanka's Debt: Better Reporting Can Help-A Case Study on China Debt."
- Wijesinghe, Asanka. 2022. "Russia-Ukraine Conflict: Economic Implications for Sri Lanka." Talking Economics. February 28.